

민주당 '민주세력 대통합' 의지 있나

외부인사 영입 지지부진·정동영 복당 등 미온적 “지도부 기득권 포기 변화 모습 보여줘야” 지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세력 대통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의 미온적 대응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끌어 모을만한 '외부 인사 영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외로 고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통합과 혁신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민주당 외부에 머무르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대거 흡수시켜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복당을 요구하고 있는 무소속의 정동영·신건·유성업 의원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동영 의원 등의 복당은 지방선거에 미묘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동영 의원 등의 복당이 이르면 다음달이나 늦으면 3월에나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해찬 전 총리 등 민주당 외부에 머무르고 있는 과거 정권 인사들의 민주당 참여 문제도 좀처럼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과감한 기득권 포기 선언 등을 통해 통합의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친노무현 신당인 국민참여당, 그리고 정동영 의원,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참여하는 '대통합원탁회의'를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난립한 범민주진영이 통합을 이루지 않고는 지방선거 승리는 요원하다"며 "단순한 '선거연대가 아닌' 거대여당에 맞설 수 있는

'거대여당'이 필요하다"며 '통합야당론'을 제기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광주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의 끊임없는 복당 요구도 예외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전남지역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다가 제명된 당원들을 지난해 대부분 복당시킨 점을 감안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외부인사 영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내에 '뉴 민주당 선언'과 함께 대대적으로 외부인사 영입 행사를 치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인재 풀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민주당이 기득권 포기 등을 통한 과감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세력 통합과 외부 인사 수혈을 위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며 "모든 기득권을 버린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민주세력 대통합론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세종시 기자회견 갖는 정의화 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위원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종시 특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논란 불식·지역 여론 다독이기

■ 이대통령 '세종시 5대 원칙' 제시 왜 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정 총리에 게 지시한 '세종시 5대 원칙'은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지역 여론을 다독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정국'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5대 원칙은 ▲타 지역 유치 사업 배제 ▲신규 사업 유치 ▲고용창출 사업 위주 ▲지역여론 수렴 ▲해외자본 유치 등이다.

먼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타 지역이 유치하는 사업이나 기능은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건설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사안인 만큼 자칫 다른 지역에서 '역차별' 비판을 제기할 경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 수정 건설과 관련,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대상 지역의 우려와 반발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신규사업 위주로 유치할 것도 주문했다. 세종시를 신성장동력의 메카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고용창출 사업 강조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일자리정부'를 선포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충청권에서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야권 "세종시 수정안 졸작중 졸작"

민주당 등 야당은 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기업, 연구소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 초안 내용이 알려지자 "졸작 중의 졸작"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수정안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를 들쭉날쭉한 말이나"며 원안 추진을 거듭 촉구한 뒤 "일부 대기업 계열사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그 재벌총수의 사면과 맞바꿨다는 특혜시비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수정안은 퍼포주기 특혜와 기업손목 비틀기라는 투트랙으로 준비된 행정복합도시 백지화 계획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부가 오는 11일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는대로 토론회 및 규탄대회 개최 등 대대적 반대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8일 당 '세종시 대책위' 회의, 10일 계룡산 등반대회 등의 일정도 잡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여론 동향이 수정안 향배를 가늠하는 변수라는 판단에서 여론의 흐름도 주시하고 있다.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나쁘지 않을 경우 자칫 수정안 지지투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고민에서도.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세종시의 본질을 도외시하며 편법, 탈법, 속임수로 '재벌특혜 특별사면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삼성그룹의 이름을 세종그림으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정부 수정안은 온갖 술수와 꼼수를 동원해 세종시 백지화를 꾀하려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명숙 출마... 野 복잡해진 서울시장 구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쟁구도가 복잡해졌다.

한 전 총리는 5일 시민권포모임 신년 오찬회에서 "여러분과 국민이 요청하는 결정에 따라 각오이며 마지막 힘을 쏟을 생각"이라며 출마 의향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표시한 김성순 의원 등 민주당 내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이 복잡한 구도 속에서 경쟁하게 됐다.

민주당은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등을 고려하며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을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경선이 원칙

민주당 경선 원칙속 일부선 전략 공천 거론도 국민참여당 유시민·진보신당 노회찬 등과 경쟁

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한 전 총리 측과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를 범민주진영 후보로 추대하거나 외부인사를 영입, 전략 공천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 결정이 지방선거 승리의 결인차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훌륭한 후보를 영입할 때는 전략공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대 조국 교

수, 방송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 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입 후 전략 공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 인사는 "전략공천은 있을 수 없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성순 의원은 "여야 공히 국민경선제로 가는 추세에서 1인을 위해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승복하기 어렵다"고 못박았고, 이계안 전 의원의 "당이 중립한

리더십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은 필패의 길"이라고 했다.

비주류는 또 한 전 총리의 공천에 대해서도 "검찰 기소 종인데 출마할 경우 자칫하면 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야권 단일화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 전 장관 측 관계자는 "향후 선거연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친노라는 규정 자체가 애매한 데다 당과 당 간의 문제의식 등에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2010년 7급공무원시험 4월 10일/ 9급공무원시험 7월 24일
전남지방직 9급 5월 22일/ 전남지방직 7급 10월 9일

압도적 1위 한빛! "1월반 전직종 마감"

7급 공무원 2월 1일 시작반 특전 **1월 5일 이후 수강등록자 전과목 1개월 무료특강**

»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어려운 임용고시 교육행정직 시험으로 전환"
교육행정직 합격특강

9급 문제풀이 전과목 한빛교수진 직접출제, 교재무료

=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 8,000명 증원에정 =
소방직 전문 학원 소방체력측정기 무료체험

마감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자매학원 ▶ 김영편입학원(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한빛경찰학원(북구청 앞 062-262-3553) **062-234-0234**